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6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01 석유화학/재생에너지/배터리

『 Key Takeways 』

-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산업의 세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석유 산업의 경우 탄소포집기술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중국산 부품 사용시 세제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 유럽의 전력난이 장기화되자, EU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특정 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에 예외를 두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영국, 독일 등이 전기요금 지원 정책 수립에 나섰다.

- 중국 배터리 업계의 해외 진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CATL은 지난 5월 홍콩시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유럽과 신흥국에서의 현지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美 에너지 세제개편 본격화... 화석연료 '세액공제 확대', 재생에너지는 규제 강화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에서 석유 증산에 활용되는 탄소포집기술(EOR, Enhanced Oil Recovery)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상원 재무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은 해당 기술에 대해 톤당 85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며, 이는 영구 저장 방식(Carbon Sequestration)과 동일한 수준이다. 기존 세제혜택은 톤당 60달러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은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것으로, EOR 기술을 단순 석유 증산 수단이 아닌 장기적인 탄소감축 경로로 인정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해석된다. EOR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고갈된 유전에 주입해 잔여 석유를 추출하면서, 해당 탄소를 지하에 일정 기간 저장하는 구조다.

다만 환경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탄소감축을 명목으로 한 세액공제가 석유 생산 확대와 결합될 경우, 기후중립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재생에너지 산업계는 상원 주도의 세제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7일, 상원은 2027년 이후 완공되는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부품 사용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세액 공제 자격을 제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모듈·배터리·인버터 등 주요 부품 공급망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다수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약 350GW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가 약 5500억(744조원) 달러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태양광산업협회는 세제혜택 개편으로 인해 약 33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300개 이상의 제조시설이 폐쇄 또는 일시 가동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美, 원유생산용 탄소포집\(EOR\) 기술에 세액공제 확대](#)

□ EU, 전기요금 부담 완화 위한 산업 지원 정책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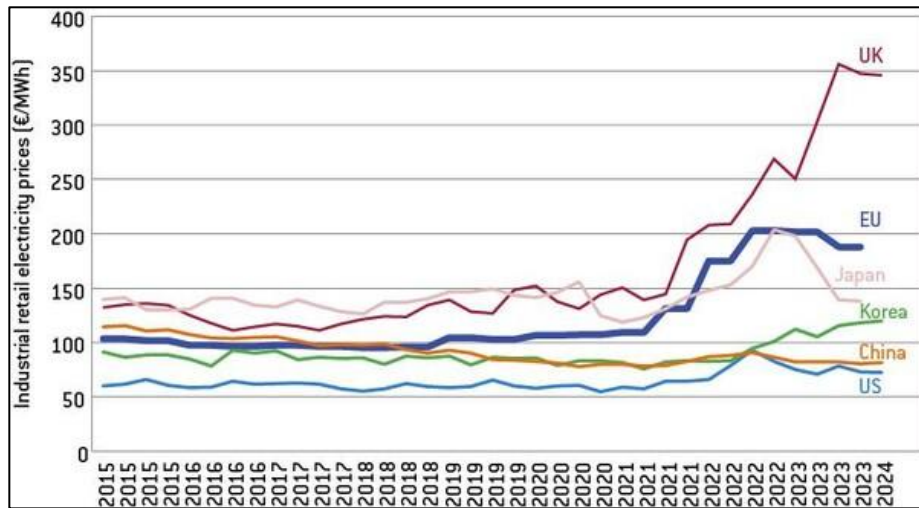
유럽연합(EU)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는 전력 의존도가 높은 철강, 금속, 화학 등 중공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조치다.

EU 집행위원회가 준비 중인 중공업 전기요금 보조금 정책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은 최대 3년간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혜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감면 규모는 도매 전력단가의 최대 절반 및 연간 전력사용량의 최대 50%로 제한되며, 수혜 기업은 보조금 중 일부를 탈탄소화 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U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전력난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흔들리면서 국가 보조금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게됐다.

EU 차원의 보조금 정책과 발맞춰, 영국과 독일은 산업계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제조업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철강, 유리, 세라믹 등 약 7000개 기업이 포함되며, 주요 혜택으로는 재생에너지 부과금 일부 면제, 전력망 연결 요금 최대 90% 할인 등이 있다. 특히 '산업경쟁력지원제도(British Industrial Competitiveness Scheme)'를 도입해 메가와트시(MWh)당 최대 40파운드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산업계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망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증가 추세/:Bruegel

독일 또한 전력세 감면을 포함한 산업계의 전기요금 지원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전기요금 지원 정책은 일반 소비자까지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산업·농업·임업 부문에 한해 지원 범위가 조정됐다. 다만 독일 산업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조금의 적용 범위가 협소하고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력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독일 산업계는 경쟁력 회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EU,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전기요금 완화 지원...2030년까지 한시 적용](#)

[☞ 영국, 기업 전기요금 최대 25% 감면... 10년 산업 로드맵 공개](#)

□ 中 배터리 업계,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의 배터리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니오(Nio), CATL 등의 주요 기업들은 배터리 교환 인프라 구축과 유럽 현지 생산거점 확보를 통해 가격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교환식 배터리는 구매 비용과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유럽 내 전기차 확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니오는 2025~2026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루마니아 등 7개국으로 유럽 내 진출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는 약 60개의 배터리 교환소를 운영 중이며,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 EV' 브랜드와 배터리를 이원화하여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독일 국제 모터쇼의 CATL 홍보 부스/CATL

니오와 함께 배터리 교환 기술을 개발 중인 CATL은 2024년 중국 내 약 1000여개의 배터리 교환소를 건설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약 1만 개의 교환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에 배터리 교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 자동차제조사들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CATL은 이미 독일과 헝가리에 배터리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배터리 교환 인프라 확대는 유럽 내 다운스트림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CATL은 2025년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 46억달러(약 6조2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자금의 90% 이상을 유럽을 포함한 해외 시장 확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유럽 내 배터리 공장 확충, 기술 라이선스 확대,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는 현지 합작사 설립, 공동투자, 기술 라이선스 등의 형태로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생태계를 구축 중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광물 채굴부터 재활용까지를 아우르는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CATL, 배터리 교환 기술 유럽 진출 시동](#)

[☞ '美 압박 속 홍콩 상장' CATL 쟁위권, 청정에너지 확장 선언](#)

『 Editor's Comment』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의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중국 기업은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 역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6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02 반도체/IT/철강/조선

『 Key Takeways』

- 미국이 동맹국 기업의 중국 공장까지 수출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정학 리스크가 실질 대응 국면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AI를 국가 산업 정책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반면 IT 개발자 단가는 급락하는 추세다.
- 글로벌 철강 산업이 지정학 리스크와 전환 실패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유럽의 고에너지 비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 국제 선박재활용협약(HKC)이 발효됐다. 선박 규제 대응도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 美, 삼성·SK 중국 공장에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 면제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각) 제프리 케슬러(Jeffrey I. Kessler) 미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이 세 기업에 직접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삼성전자(Xi'an, 시안)와 SK하이닉스(Wuxi, 우시), TSMC(Nanjing, 난징)는 미국 정부의 개별 승인 없이도 자국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포괄적 예외 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예외를 폐지하고, 향후 모든 장비 반입에 개별 허가 절차를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 기업을 포함해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입되는 경로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 내 우려도 크다. 장비 반입이 지연되면 동맹국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역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오히려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지배력이 강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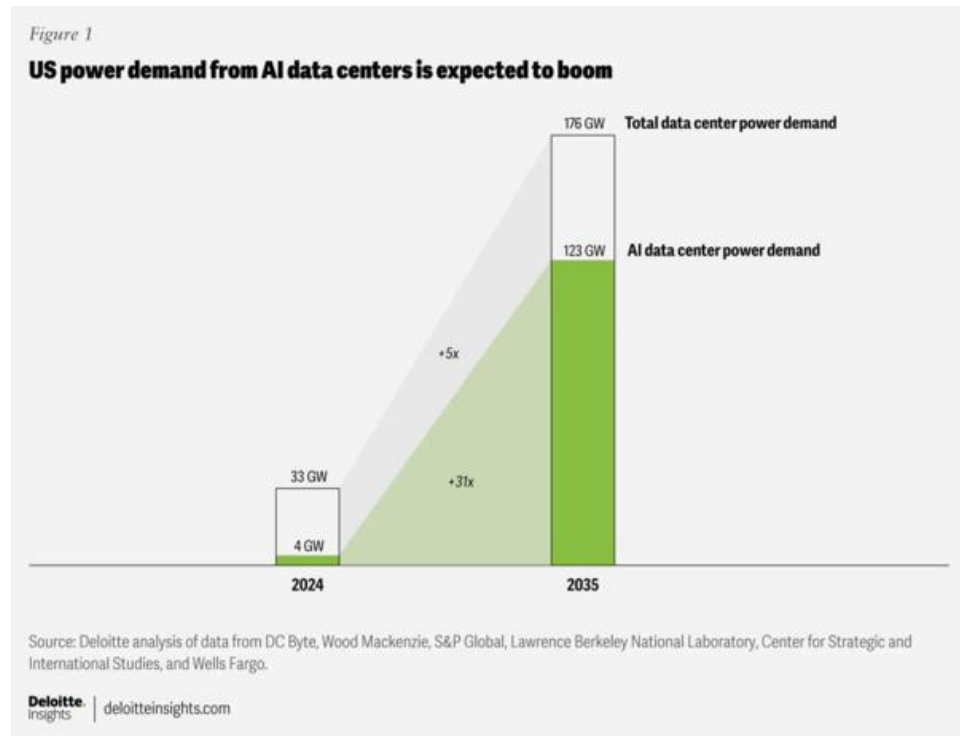
한편,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는 유럽 장비업체의 실적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는 26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ASML의 2026년 매출이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전망,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 17% 낮은 수준이다. 제프리스는 DRAM용 반도체 장비 수요 둔화와 함께 중국향 출하 감소 가능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추가 강화할 경우, ASML의 중국 매출은 2025년에 16%, 2026년에 8%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 희토류로 미국 압박...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 美, AI 인프라 규제 완화 추진...고효율 냉각·폐열 활용 기술 확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 산업 확산을 위해 전력망과 인허가 등 인프라 규제 완화에 나선다. 로이터는 27일(현지시각) 백악관이 7월 23일 'AI 액션 플랜'을 공개하고, 연방 토지 제공, 단일 수질법 적용, 전력망 우선 연결 등의 행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AI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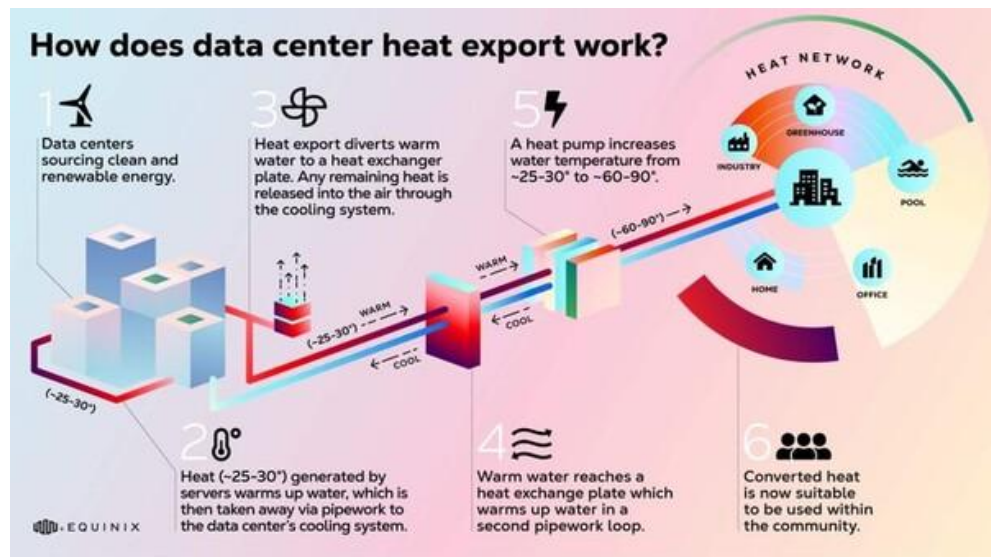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 전망. / 딜로이트

AI 수요 폭증에 따라 전력 공급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딜로이트는 2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4GW에서 2035년 123GW로 3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SMR(소형 모듈 원자로), 지열, 핵융합 등 저탄소 전원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시점이나 발전용량 측면에서 단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으로 고효율 냉각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액침냉각(Immersion Cooling)은 고밀도 서버를 절연액에 담가 직접 냉각하는 방식으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서버에 적용을 확대 중이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가 평촌 제2데이터센터에 시범 도입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Omdia)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이 2024년 76억7000만달러(약 10조4000억원)에서 연평균 18.4% 성장해 2028년 168억7000만달러(약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폐열 회수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 NTT데이터는 독일 베를린에서 데이터센터 폐열을 주거지 난방에 활용 중이며, 에퀴닉스는 캐나다 마컴에서 상업·주거단지에 폐열을 공급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설계 단계부터 폐열 재활용을 전제로 하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에퀴닉스의 데이터센터 폐열 회수 시스템 도식. 서버에서 발생한 폐열을 열교환기와 히트펌프를 통해 인근 주거지·산업단지·온실 난방 등에 재공급한다. / 에퀴닉스(Equinix)

AI는 노동시장 구조도 바꾸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전체 코드의 25% 이상을 AI가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유럽·남아시아 개발자 단가가 9~16% 하락했다.

딜로이트는 AI가 데이터센터 일자리를 전면 대체하기보다는 운영·보안 등 특정 직무로 인력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딜로이트 보고서 - Can US infrastructure keep up with the AI economy?](#)

□ 유럽 철강업계, 녹색 전환에 제동...SSAB·아르셀로미탈 투자 연기

유럽 주요 철강사들이 잇달아 녹색 전환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있다. 스웨덴 SSAB는 19일(현지시각), 룰레오(Luleå)에 추진 중인 전기로 기반 신규 제철소의 가동 시점을 당초 2028년 말에서 2029년 말로 12개월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영 전력망 운영사 스벤스카 크라프트네트(Svenska kraftnät)의 송전망 증설 지연으로 전력 연결 일정이 늦춰졌다는 설명이다. SSAB는 총 45억유로(약 6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이 독일 브레멘(Bremen)과 아이젠히텐슈타트(Eisenhüttenstadt) 제철소에서 추진하던 수소 환원철(DRI) 및 전기로(EAF) 전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아르셀로미탈은 "독일의 전력 비용이 국제적 기준 대비 높고, 향후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승인한 13억유로(약 1조9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은 아직 집행되지 않아 환수 절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셀로미탈은 고정비 외에도 수소 가격, 수입산 철강 증가, 수요 둔화 등을 복합적 요인으로 지목했다. 영국 원자재 산업 전문 매체 패스트마켓츠(Fastmarket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럽 내 철강 소비 중 약 30%가 수입산이며, 특히 편평 제품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아르셀로미탈은 EU에 편평 제품 수입을 현재 대비 약 50% 줄여야 한다며 수입 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아르셀로미탈은 전력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프랑스 덩케르크(Dunkirk) 제철소부터 전기로 전환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60~70%를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하고 있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격 변동성도 낮다.

한편 독일의 티센크루프(TKSE), 잘츠기터(Salzgitter), 샤를홀딩자르(Stahl-Holding-Saar) 등은 녹색 전환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총 69억유로(약 11조34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탈탄소화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르셀로미탈 철회 이후에도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르셀로미탈, 프랑스엔 투자하고 독일은 철회...전력비 격차가 갈랐다](#)

□ 선박 해체부터 운항까지...탄소 저감 기술 상용화 본격화

26일, 홍콩 국제협약(HKC, 선박재활용협약)이 발효되면서 선박 해체 단계에서도 환경·안전 기준이 국제적으로 의무화됐다.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은 유해물질 목록과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를 보유해야 하며, 미이행 시 외국 항만에서 운항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체시설의 국제 인증 확보를 위해 로봇 절단기 도입과 AI 기반 해체계획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국제 선박재활용협약이 발효됐다. / IMO

운항 단계에서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적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선박 배출가스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이 실증 단계에 진입했다. 영국 스타트업 시바운드(Seabound)는 선박 엔진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장치를 개발해, 이산화탄소 78%, 황산화물 90% 제거 성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치는 수에즈 운항 구간에서 실험을 완료했으며, 교환형 컨테이너 방식으로 설계돼 선박에 쉽게 탑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친환경 추진 기술로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상용화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프로테우스 에너지는 75kW급 모듈형 연료전지 '프로테우스75(Proteus75)'를 공개하며, 2026년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소형 선박부터 적용 가능하며, 출력 확장을 위한 다중 모듈 조합 방식이 특징이다.

『 Editor's Comment』

미국의 이란 공격 등 지정학 리스크가 경제 전반을 흔들며, 규제와 비용의 셈법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AI는 규제가 풀리는 반면, 철강은 전력 비용, 조선은 환경 규제에 직면했다.

유가, 무역장벽, 분쟁 등 외부 변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6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03 자동차

『 Key Takeways』

-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수직 통합 생산구조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 내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이미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격 경쟁 심화와 공급과잉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중국의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이 장기화되며 유럽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차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U는 반도체 사태 재현을 경고하며 중국과 통계 검증 및 수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협약에 착수했다.

- EU는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 사용과 순환성 전략 수립을 골자로 한 폐차 규제를 추진하고, SBTi는 연료 추출부터 차량 주행까지의 전 과정 배출을 포함한 탄소 감축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순환경제와 기후규제라는 '이중 압박'에 대응한 제품·공정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 중국, 글로벌 전기차 주도권 강화...과잉 생산 후폭풍도



BYD의 7+4 전략을 보여주는 이미지(7개의 전통적 교통수단, 4개의 특수 분야 교통수단 집중확장 전략) / 이미지 출처 BYD 홈페이지

중국 전기차(EV) 시장의 절대 강자 BYD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테슬라 대비 6배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지에도 생산기지와 유통망을 구축해 '아시아 현지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EV 시장에서도 중국은 2025년 세계 판매량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지배적인 위상을 확보 중이다. 특히 중국은 전기차 평균 구매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유일한 주요국으로, 가격 경쟁력이 시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잉 공급과 경쟁 심화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BYD가 촉발한 가격 전쟁으로 인해 일부 브랜드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생산가동을 하락과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업계에 자율 규제를 촉구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대형 브랜드 중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EV 판매 25% 돌파...중국·신흥국 질주, 미국은 제자리](#)

[☞BYD發 전기차 가격 전쟁, 중국 정부도 '긴장'...업계 구조조정 본격화](#)

[☞중국 BYD, 태국서 테슬라 6배 판매...동남아 전기차 시장 '석권'](#)

□ 中 희토류 수출 통제, 유럽 공급망 흔들...“반도체 사태 재현 우려”

중국이 희토류 및 자석 수출을 제한하면서 유럽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조치를 “산업 전반에 매우 심각한 교란을 초래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직접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OECD 회의에서 “희토류 자석은 자동차를 포함해 대부분의 산업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라며, 중국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반도체 공급난과 유사한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역시 희토류 수급에 영향을 받고 있다. 포드는 관련 부품 부족으로 시카고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으며,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중국 내 승인 절차가 업계 기대보다 훨씬 더디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희토류 공급 리스크가 전 세계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병목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수출 시스템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희토류 수출 기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은 외부 검증이 어렵고 행정적 지연도 잦다. EU와 중국 간 관련 무역 통계도 서로 불일치하고 있어, 통계 정확성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EU, 中 희토류 수출 제한에 “산업 전반 위협”...자동차업계 공급난 우려](#)

□ 순환경제와 감축목표 정비...車 산업, EU-SBTi발 ‘이중규제’ 맞닥뜨려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유럽연합(EU)과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의 연이은 규제 개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EU는 신차 생산 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폐자동차(ELV) 규제’ 개정안에 합의했다. 신차내 재활용 플라스틱 비중을 10년 내 2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트럭과 오토바이 등 상용차까지 규제 대상을 넓혔다. 제조사는 부품 라벨링과

순환경제 전략 수립 의무를 지며, 철강·알루미늄 등 타 원자재 재활용 의무도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SBTi는 자동차업계의 탄소 감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가이드라인 개편에 착수했다. '연료 채굴부터 차량 주행까지' 전 과정 배출을 반영한 'WTW(Well-to-Wake)' 기준이 새로 도입됐으며, 고소득국 대기업은 중소기업과는 차별화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스코프3는 절대량 감축·집약도·공급망 정렬 중 택일 가능하지만, 고배출 영역 우선 감축 원칙은 유지된다.

이처럼 순환경제와 배출 감축을 동시 압박하는 규제가 본격화되며, 자동차 제조사는 제품 설계·소재 조달·전력구매 방식 등 전방위적 재편을 요구받고 있다.

[☞ EU, 신차대상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화 추진...10년 이내 25% 달성 목표](#)

[☞ SBTi, 자동차 감축 목표 기준 개편...고소득국 기업에 더 엄격한 적용](#)

『 Editor's Comment 』

중국산 전기차의 빠른 확산과 이에 따른 글로벌 시장 재편, 희토류 공급 차질 우려 등 미·중 갈등 여파, 여기에 EU를 중심으로 한 감축 기준 강화까지 맞물리며, 자동차 산업은 기술·자원·규제 측면에서 전례 없는 구조적 전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년치 희토류 자원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을 펼친 가운데, 이처럼 자동차 산업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자원 수급 리스크 관리에 대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전반의 내재화를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전망이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6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04 기후테크/순환경제

『 Key Takeways』

- EU는 미·중 경쟁에 대응해 청정산업 보조금 정책을 전면 전환했다. 1000억유로 규모의 투자와 함께 기존 규제 원칙을 깨고 정부의 기업 지분 투자까지 허용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직접 생산 보조금 방식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탄소제거 산업에서 측정·보고·검증(MRV) 표준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WRI(세계자원연구소)가 제시한 연방 차원의 MRV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유럽은 인증체계를 구축했지만 신뢰성 문제로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글로벌 패션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무기로 중국 울트라패스트패션을 견제하고 있다. H&M과 쉬인의 환경 평가 점수의 격차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순환 섬유 생태계 구축과 프랑스의 울트라패스트패션 광고 금지 등 규제·민간 차원의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

□ EU, 미·중 견제 위해 청정산업 보조금 전략 전환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유럽연합(EU)과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의 연이은 규제 개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청정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유럽연합(EU)의 국가보조금 정책이 전환점을 맞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각)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의 일환으로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CISAF)를 채택하고, 청정기술 제조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탈탄소화에 1000억유로(약 158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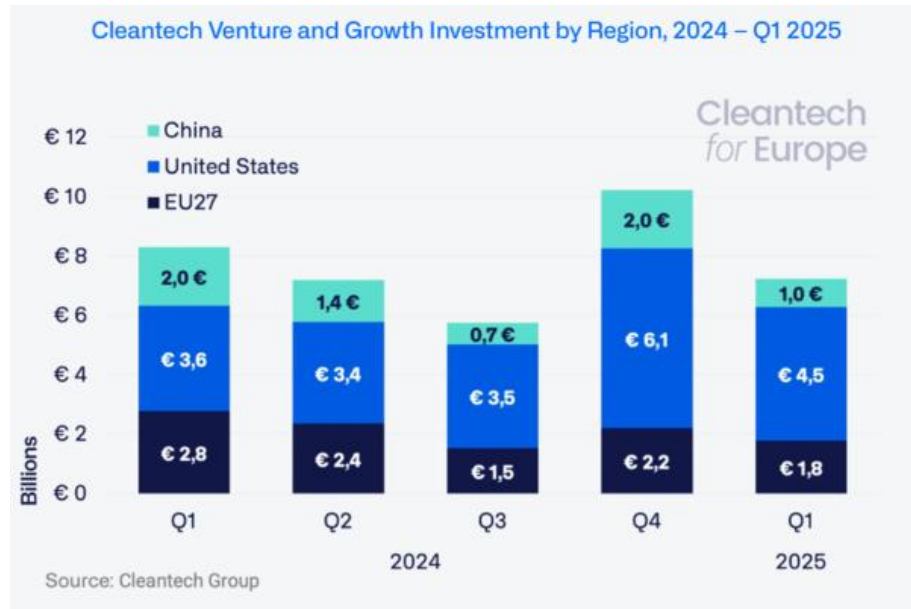
새 프레임워크는 태양광·풍력·배터리·수소 등 핵심 청정기술 제조 역량 확대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에 중점을 둔다. 프로젝트별로 최대 2억유로(약 3166억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철강·시멘트·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최대 3년간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정부의 기업 지분 투자까지 허용한 데 있다. 이는 각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이익도 함께 환수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EU 집행위는 EU 내 보조금 경쟁을 막고 단일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 회원국이 자국 산업의 운영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미국,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위는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테레사 리베라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EU는 글로벌 경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 투자를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탈탄소화, 청정제조 등이 유럽의 주요 투자 분야로,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유럽 환경단체 T&E는 같은 날 낸 성명에서, 이번 EU 보조금 개편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생산 실적에 따라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클린테크 산업을 빠르게 키웠지만, EU는 생산 보조금을

제외하고, 기업 지분 투자나 혁신펀드 연계 지원 등 제한적인 방식만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T&E는 “이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지원과 거리가 멀어 민간 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녹색), 미국(파랑), EU(검정)의 클린테크 VC 투자 규모 추이/Cleantech for Europe

실제로 유럽은 클린테크에 대한 민간 투자가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둔화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럽의 클린테크 이니셔티브인 '클린테크포유럽(Cleantech for Europe)'은 보고서에서 "유럽의 클린테크 스타트업이 올해 1분기에 유치한 벤처캐피털(VC) 투자 규모는 18억유로(약 2조8474억원)로 전 분기보다 18% 줄며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45억유로(약 7조원)를 기록해 여전히 유럽을 크게 앞섰다. 특히 유럽의 후기 단계 투자(시리즈 B 이후)는 40건에서 23건으로 43% 급감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자 신뢰 부족을 드러냈다. 중국의 투자 규모도 절반으로 줄었지만, 반도체 관련 클린테크 투자는 증가했다.

[☞ EU, 청정산업 보조금 확대했지만... "보조금보다 지분 투자하라"](#)

[☞ EU rules out production aid in blow to battery and cleantech industry](#)

[☞ EU CLEANTECH QUARTERLY BRIEFING](#)

□ 탄소제거 산업 급성장 속 표준화 난제...국가 차원 MRV 체계 시급)

탄소제거(CDR) 산업이 성장하면서 측정·보고·검증(MRV)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탄소제거에서 높은 수준의 MRV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WRI는 "표준의 일관성 부재로 인해 탄소제거(CDR) 공급업체들이 여러 표준을 충족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WRI는 특히 "CDR 지원 정책들이 서로 다른 MRV 규칙을 제시할 경우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연방 MRV 기능이 ▲민간·학계·정부의 기존 전문성 활용 ▲연방정부의 표준 설정과 승인 기관의 검증 역할 분담 ▲과도한 크레딧 발급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상 체계 관리 ▲생애주기 탄소 회계와 환경·사회 영향 평가 등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과학 기반 표준 설정 ▲CDR 프로젝트 결과의 공개적 투명 보고 ▲CDR 접근법별 측정 불확실성 허용 수준 가이드라인 마련 ▲대기·수질 영향 등 비탄소 환경 영향 평가의 일급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chatgpt 이미지생성/임팩트온

제도화 측면에서는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제거 인증체계(CRCF)는 2024년 12월 공식 발효되어 2026년부터 인증을 시작할 예정으로, 탄소제거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다만,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 환경연구기관 오에코연구소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CRCF 개정 초안이 "지금까지 검토한 수백 개 방법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 및 탄소크레딧 품질지표(CCQI) 기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해당 체계가 ▲추가성 검증 미비 ▲기존 활동에 대한 소급 크레딧 발급 ▲과도한 유연성이 허용된 탄소 제거량 산정 방식 ▲간접 토지이용변화(leakage) 반영 미흡 ▲감축 효과의 영구성(permanence) 미확보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과잉 크레딧 발행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아직 체계적인 연방 차원의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탄소제거 분야의 환경정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입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탄소 전문 컨설팅 기업 카본 다이렉트와 맥나이트 재단이 발표한 미국 첫 탄소제거-환경정의 연관성 실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CDR 프로젝트 342건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집중되는 불균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CDR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프로젝트 입지 선정과 지역 사회 참여, 이익 공유 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제도화 속도보다는 질적 완성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High-Quality Carbon Removal Requires Credible and Consistent MRV — Government Oversight Can Help](#)

[Carbon Dioxide Removal: Purpose,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EU 탄소제거 인증체계, "국제기준 미달...기후목표 역행 우려"](#)

[EU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Key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미국 첫 탄소제거-환경정의 연관성 실증 보고서..."환경 불평등 반복 사례 없어"](#)

□ 글로벌 패션기업, 지속가능성으로 中 울트라패스트패션 견제

글로벌 패션 대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선도적 지위를 구축하며 중국발 울트라패스트패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테무나 쉬인 같은 중국의 울트라패스트패션 기업들이 초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기존 패션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을 지속가능성과 규제 강화를 통해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영리 환경단체 스탠드어스가 시행한 '탈화석연료 패션 평가'에서 나타난 점수 격차는 이러한 전략적 차별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H&M은 42개 패션 기업 중 B+ 등급으로 1위를 차지하며 체계적인 탄소배출 측정과 구체적인 감축 로드맵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반면 쉬인은 F 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스코프 3 배출량이 전년 대비 170% 이상 급증하는 등 환경 관리가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자라의 모회사 인디텍스도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9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지속가능성 투자 확대 의지를 보였다.

스탠드어스의 토드 파글리아 이사는 "실질적으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감축에 나서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울트라패스트패션 기업들의 환경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규제 차원에서는 프랑스가 패스트패션 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프랑스 상원은 '울트라 패스트패션' 기업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환경 영향이 큰 제품에 개당 최대 10유로(약 1만6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특히 쉬인과 테무 같은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2025년부터 시행될 '에코스코어' 제도를 통해 의류 제품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패션기업들은 순환 섬유 생태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에 나섰다. H&M이 공동 설립한 스웨덴 스타트업 사이르는 미국의 갭, 타깃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재활용 폴리에스터 공급망을 확장하고 있다. 사이르는 2032년까지 연간 300만 톤 이상의 생산 체제를 구축해 석유 기반 버진 폴리에스터보다 탄소배출량을 최대 85%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캐나다의 룰루레몬 역시 호주 스타트업 삼사라 에코와 10년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2035년까지 전체 섬유의 20%를 재활용 섬유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사라 에코의 AI 기반 효소 기술은 혼합 섬유를 20분 내에 분해해 재활용할 수 있어 기존 재활용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도 기업들을 포함한 패션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스탠드어스 평가에 따르면 42개 브랜드 중 파리협정 1.5°C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감축한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기준연도보다 배출량이 증가한 브랜드가 17곳에 달했다. 글로벌 패션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0%를 차지하고 매년 92억 톤의 섬유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기후 적응(Adaptation) 분야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조사 대상 브랜드 중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후 적응 교육이나 지원책을 마련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패스트패션 폐기물이 칠레, 가나 등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어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H&M, '패션 대기업 친환경 성적표' 1위...쉬인은 'F'](#)

[프랑스, 울트라 패스트패션 광고 금지 상원 통과... 세인·테무 정조준](#)

[H&M 순환 섬유 생태계 확장...갭·타깃도 사이르 손잡았다](#)

[룰루레몬, 호주 스타트업과 재활용 섬유 10년 장기구매 계약 체결](#)

『 Editor's Comment』

글로벌 기후정책이 확산되면서 '속도'와 '신뢰성' 사이의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EU는 청정산업 지원과 함께 탄소제거 인증에서 세계 최초로 제도화를 이뤘지만, 미국의 직접 지원 방식보다 복잡하고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패션업계에서도 H&M 같은 선도기업들이 환경 성과로 차별화를 시도하지만, 업계 전반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먼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6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05 식음료

『 Key Takew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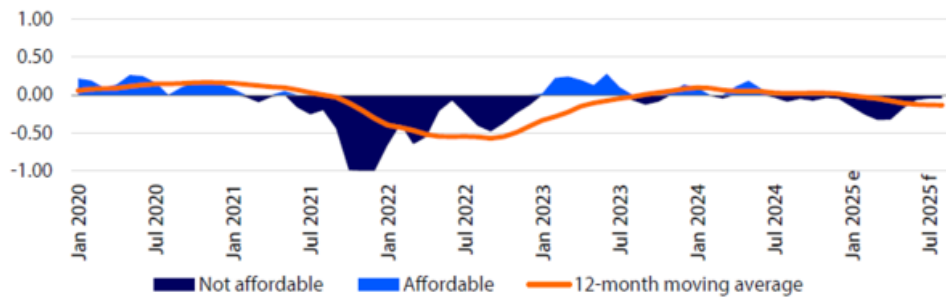
- 중동발 군사적 리스크로 요소·암모니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2022년 전쟁 당시와 유사한 비료·사료 원가 충격이 재현되고 있다.
- 식음료 업계가 온실가스를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환형 감축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대규모 설비 없이도 적용 가능해, 중소기업 중심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 네슬레USA와 코나그라가 합성 색소 전면 퇴출을 선언했다. 정치권 압박과 맞물리며, 미국 식품업계 전반에서 성분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 중동발 비료 공급 차질, 글로벌 식량 원가에 '압박'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의 암모니아 공장 가동 중단과 이스라엘 가스전 폐쇄 여파로 이집트 비료 생산이 멈추며, 중동 전체 요소·암모니아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기존에도 중국의 수출 제한, 인도의 수입 감소 등으로 공급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며 국제 비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농업 전문 시장조사기관 라보리서치(RaboResearch)는 2025년 1분기 글로벌 요소(urea)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였던 2022년과 유사한 급등 흐름이다. 비료 가격 상승은 사료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이후 국제유가는 단기 상승세를 보이며 물류비에도 영향을 미친 바 있다.

Figure 3: Nitrogen affordability index turns negative



2025년 1분기, 요소(urea)를 포함한 질소 비료의 구매력 지수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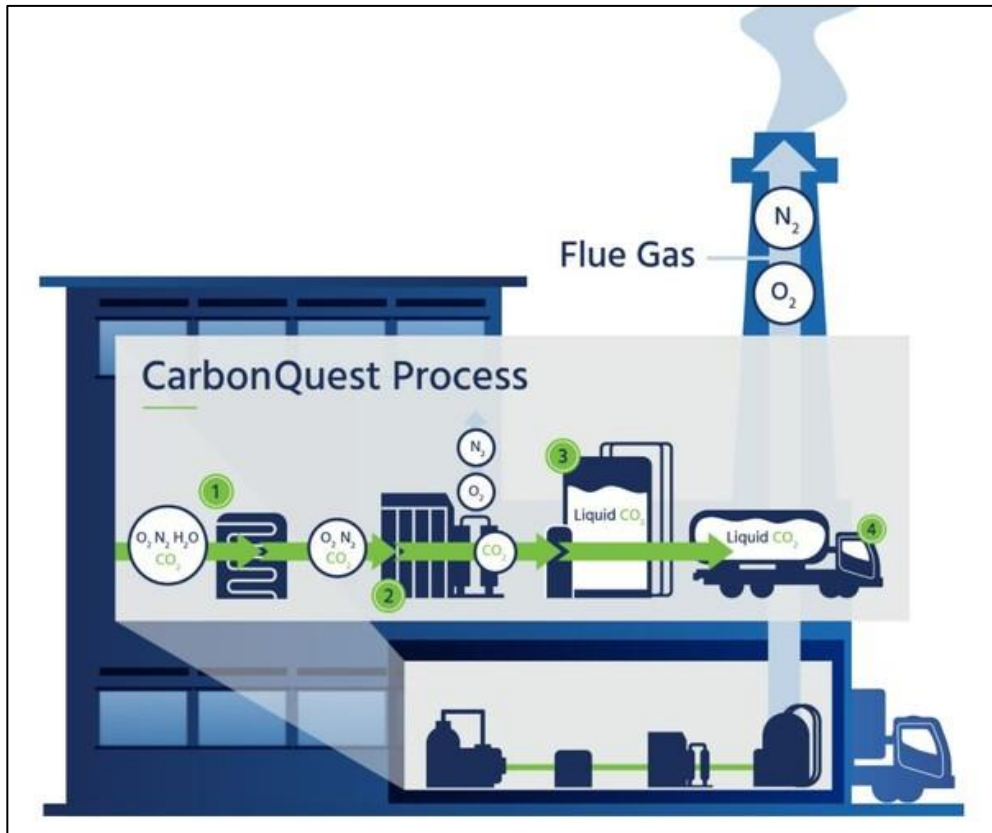
/ RaboResearch

식품·음료(F&B) 업계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사료, 비료, 에너지 가격의 연쇄 상승은 낙농품은 물론 가공식품과 음료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정비 비중이 큰 유제품이나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식품 분야에서는 원가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라보리서치 -2025년 4월 반기 비료 전망 보고서\(Semiannual Fertilizer Outlook\)](#)

□ 식음료 탄소 감축, '현장 자원화'로 전환...낙농 메탄·음료 CO₂ 재활용

식음료 업계가 탄소 감축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단순 배출 저감에서 벗어나 온실가스를 현장에서 직접 처리해 생산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형 감축 모델'이 실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공정 중 발생한 CO₂를 포집해 액화·정제한 뒤, 음료 생산용 탄산재로 현장에서 재사용한다./ CarbonQuest 홈페이지

대표적인 사례는 낙농장의 메탄 자원화다. 아마존이 투자한 스타트업 윈드폴 바이오(Windfall Bio)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낙농장에서 메탄 85% 이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MEM'이라 불리는 메탄 분해 미생물을 활용해, 분뇨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제거하고 이를 유기 비료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시범 사업에서는 미생물이 30일

이상 안정적으로 메탄을 분해했으며, 현재는 소 1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에도 적용 가능한 비용 회수형 시스템을 설계 중이다.

음료 제조 공정에서도 이 같은 순환형 접근법이 적용되고 있다. 탄소포집 스타트업 카본퀘스트(CarbonQuest)는 워싱턴주의 한 음료업체에 분산형 탄소포집 시스템(DCCS)을 도입했다. 공정 중 배출된 이산화탄소(CO₂)를 현장에서 포집해 액화·정제한 뒤, 음료 생산용 탄산재로 재활용하는 구조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5년간 약 2만2000톤의 CO₂ 감축 효과가 기대되며, 카본퀘스트는 해당 기술을 지역 내 식음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급 모델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두 기술 모두 온실가스를 현장에서 직접 감축하고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대규모 설비 없이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어 확산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 식음료 공정 탄소, 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카본퀘스트 첫 사업](#)

[☞ 아마존이 투자한 '메탄 먹는 미생물', 낙농장서 85% 감축 실증](#)

□ 식음료 탄소 감축, '현장 자원화'로 전환...낙농 메탄·음료 CO₂ 재활용

미국 식품 대기업들이 합성 색소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슬레USA(Nestlé USA)와 코나그라 브랜드(Conagra Brands)는 6월 25일(현지시각), 식품 및 음료 전 제품에서 FD&C 색소(Food, Drug and Cosmetic colors)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FD&C 색소란 식품(Food), 의약품(Drug), 화장품(Cosmetic)에 사용을 승인한 합성 착색료로, Red No.3, Yellow No.5 등으로 구분된다. 가격과 보존성 측면에서 널리 사용됐으나, 일부 색소는 발암 가능성이나 행동장애 등과의 연관성이 제기돼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네슬레는 2026년 중반까지 미국 내 전체 제품에서 FD&C 색소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제품군에서 합성 색소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며, 현재 90%

이상이 이미 해당 색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코나그라 또한 올해 말까지 냉동식품군에서 해당 색소를 제거하고, 2027년 말까지 전 제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압박도 주요 요인이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 장관은 FD&C 색소를 '독극물(poison)'로 규정하며, 관련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해왔다.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부터 레드 No.3 색소의 식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며, 텍사스주는 44개 색소 및 첨가물에 대한 라벨 표시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2028년부터 해당 색소를 포함한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정치적 압력과 소비자 인식 변화,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미국 식품업계 전반의 제품 포뮬러 전환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 FDA - 레드 No.3 식품 사용 금지 예정](#)

[☞ 캘리포니아주 - 레드 No.3 등 4종 식품 첨가물 금지](#)

[☞ 웨스트버지니아주 - 식품 색소 및 보존제 사용 금지](#)

『 Editor's Comment』

중동 분쟁, 규제 강화, 소비자 인식 변화 등 외부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식품 업계는 온실가스 자원화 등 기술적 해법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올해도 이어질 이상기후에 따른 식품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를 얼마나 완충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